

인수위 '여성할당제' 외면

여성구성원 12% 기대에 훨씬 못미쳐

여성계, 여성공약감시기구 만들어 대응방침

여성단체들은 노무현 당선자의 여성정책공약인 여성할당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전문위원·자문위원 구성단계에서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해말 정부분과 이은영(52) 외대 교수, 경제 2분과 박기영(44) 순천대 교수, 사회문화 여성분과 정영애(47) 충북여성정책관 등 3명(12%)만을 여성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는 여성단체가 요구하는 여성할당 3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여성계는 이에 대해 여성할당공

약이 잘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전문위원 1백70여명 구성 역시 해당부처나 정당으로부터 인사가 파견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할당이 지켜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여성계는 인수위 각 분과의 자문위원, 새 정부 조각 시 여성할당 30%도입이라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계는 또한 인수위에 △호주제 폐지 △중대선거구제로 개혁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할당제 도입 △5급 이상 고위공직자 30% 여성할당 △성인지예산 △보육예산 증액 등 여성공

약 이행을 촉구하고, 여성공약감시기구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화)는 논평에서 "인수위원회 내의 성주류화를 위한 여성참여 보장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명단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각 분과별 간사에 여성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극히 낮은 고위 의사결정 자리에 여성참여 현실이 개선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남성들의 손으로 만든 여성정책에 당선자의 약속이 제대로 구체화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

경숙·정현백·이강실)은 논평을 통해 "2001년 12월 말 현재 37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도 평균 27.7%인데, 여기에도 미치지 못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롭게 시작될 향후 5년의 모든 국가정책에 여성적 관점을 도입시키기 위해 여성의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며, "그 첫 단추를 끼는 인수위원회에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선거기간 내내 누구보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여성정책을 제시해 왔던 당선자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여성단체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에 여성할당제를 요구하는 것은 도식적인 여성할당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새 정부 조각 시 30% 여성할당을 도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대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은 "사회·문화·여성분과는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 30% 여성할당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새 정부 조각 시 여성할당 30%가 될 수 있도록 당선자에게 의견을 올릴 생각"이라고 답했다.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은 "여성인력 풀이 부족해서 여성할당제 도입이 쉽지 않다"는 인수위의 답변은 이전 정부들과 별 차이가 없는 답변"이라며, "여성인력 풀이 부족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남 사무총장은 "인수위가 여성단체들이나 범 여성계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능력 있는 여성인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새 정부 조각 시 30% 여성할당 도입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정책공약도 이행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성순 기자newvoice@ngotimes.net

■제1의 성/헬렌 피셔 지음/생각의 나무

미래는 여성들의 시대?

전통적으로 여성은 경제활동의 약자로 간주되어 왔다. 여성의 직관과 상상력은 비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비난받았으며 피라미드식 조직 구조에서 여성의 매력적 사고는 종종 비효율적인 것으로 폄하되어 왔다. 여성성은 과연 부정적이기만 한 것일까.

미국의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제1의 성'에서 여성이야말로 21세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라고 단언한다. 저자는 이미 독창적인 저서 '사랑의 해부'에서 사랑의 본질을 화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파악해 생물 쪽짓기 행위의 진화론적 성격을 밝혀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책에서도 생물학적 결정론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여성이 생물학적으로도 사회경제적으로도 으뜸가는 성임을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남성은 유목 생활을 하던 '아득한 그 옛날'엔 평등한 관계였다. 그러나 쟁기와 발명과 더불어 인류가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제2의 성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가부장적 농경사회에서는 집중적이고 직선적인 '계단식 사고'를 하는 남성이 보다 유리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혁명을 계기로 다시 경제 일선에 나서게 된 여성노동력은 그 속성상 21세기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합된다. 저자는 이를 여성의 '거미집식 사고'라 정의한다. 뛰어난 언어감각과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 인간관계에 대한 중시, 사회정의에 대한 순수한 관심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여성성이야말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오늘의 '하이보그(hyborg·복합형 조직)' 환경에 맞다고 본

다. 가정, 교육, 통신, 의학, 비즈니스, 시민단체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이같은 여성적 마인드는 매우 유용하며, 여성은 다시 제1의 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다.

이 책은 생물학,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을 넘나드는 다양한 과학적 자료들을 인용하면서도 딱딱하지 않고 부담없이 읽힌다. 또 여성의 타자성을 극복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가능성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와 만난다.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생태여성주의 시각도 엿보인다.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남녀가 보완적인 양성성을 키우자는 결론은 반여성주의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남성성과 여성성이 성호르몬의 차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인가는 의문이다. 저자는 여성성의 주된 뿌리를 여성의 양육경험에 두고 있다. 그러나 육아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에게만 귀속된다는 근거는 미약하다.

강고한 남성적 질서 속에 살아가는 여성의 입장에서 미래가 여성의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에는 귀가 솔깃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이 책의 상당 부분이 현학적 추론과 가설에 머물고 있는 까닭이다. 저자는 '차이의 현상'만을 볼 뿐 여성의 차별과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차이의 구조'를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가만히 있어도 성평등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진화론적 믿음은 지나친 낙관이 아닐까. 정명진 옮김, 515쪽, 1만5000원.

김 미 희(연극평론가·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동아일보 자료사진

헬렌 피셔는 '제1의 성'에서 21세기에는 인간관계 중시 등 여성적 속성이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위부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가한 여성당직자들, 이미지에이킹 실습중인 여성공무원들, 제2금융권의 여성 기업분석가들.



특별기고

이 희 호

(李姬鎬·대통령부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부인

이희호(李姬鎬)여사가

한국일보의 전면

가로쓰기체제 전환을

기념해 여성과 정치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대통령부인으로서

처음으로 신문칼럼을 쓴

이여사는 평소 생각했던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편집자주

2008-3-16

“여성, 남성의존시대 끝내자”

21세기발전은 평등한 참여로 가능 정치 적극참여 ‘男主主義’ 타파를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참여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제도와 관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성은 이 사회와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여성단체들이 작년 대통령 선거를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여성유권자 주인공」과 「지역을 넘어 하나되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사회변혁의 지렛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었으며, 선거혁명을 여성의 힘으로 성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는 남성들만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지배했습니다. 또한 남성우위의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과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여성들의 주체적인 투표권 행사를 소홀히 여겨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란 우리의 삶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바로 우리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성이 정치를 멀리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조건을 자기가 만드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엔기구의 조사보고서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지수인 평균수명, 문자해독률, 취학률, 남녀소득차율 측정비교한 「97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175개국 중 32위입니다. 남녀소득차로만 보면 그 간격이 더욱 벌어져 146개국 중 35위로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 각 나라 여성들이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여성의 권한척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94개국 중 73위로 아주 뒤처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의 의회진출률과 고급공직에의 진출이 저조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발전상을 여성의 지위로 평가하는 오늘의 국제적 분위기에 비춰보면, 우리의 실상은 사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권리가 불평등한 것은 비단 우리만의 것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극복한 부분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보다 급속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 자신들의 정치의식과 인간으로서의 권리의식이 전환된 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간존중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인간의 존제양식에 일대변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인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평등한 참여 없이는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21세기가 직

면하고 있는 지구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원동력은 바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지금까지 여성들의 문제해결과 요구사항을 남성들의 선심에 의존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들은 여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각급 의회진출로 더러는 각급 공직진출에, 그리고 다수의 여성들은 여성운동을 통해 집단적인 의사표시와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남주주의(男主主義)를 타파하는 물꼬를 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통한 인간공동체의 건설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남녀 성비(性比) 불균형이 초래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남녀를 차별하고 구분하는 분리주의적 관행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권리가 차별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법이 바로 가족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승진에서의 남녀차별은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89년 37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가족법이 개정되어 어머니가 아버지와 같은 권리를 누리고, 아내가

남편과 그리고 딸들이 아들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미흡하지만 직장에서 남녀가 평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원하는 정치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물질 위주가 아닌 보다 인간적인 바탕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의 삶의 조건을 남성에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임 대통령은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새정부의 인사에 있어서도 여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기용하기 위해 고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집 대문에는 결혼 후 줄곧 부부의 문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라고 편지를 쓰는데도 주저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 왔던 남성 중심적 사고, 강자 중심적 사고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억압과 지배, 자연에 대한 착취를 종식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기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지방자치의 시대, 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아 보다 많은 여성들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밝게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호주제 있어야 하나 없어야 하나

호주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편에서는 호주제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봉건적 제도로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

한국일보 포럼

면 다른 한편에선 가정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해주는 미풍양속인 만큼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폐지



박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세계 78위'를 6월 유엔의 여성권협약에도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의 현주소다. 우리 여성의 권리가 우리나라의 다른 지위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이 뒤떨어진 여성의 지위 한 가운데 호주제가 있다. 민법의 친족·상속편을 가리키는 이른바 가족법 가운데 부계혈통, 남계혈통을 명백하게 드러냄으로써 여성 차별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호주제이다. 가족법상 호주제는 그 승계순위를 '아들-딸-처-모친-며느리'순으로 규정, 손자가 할머니 어머니 누나에 앞서 호주를 승계토록 함으로써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혼인의 아들, 적법한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누나에 앞서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의 신성함마저도 '아들로 대를 잇는다'는 관념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손자가 할머니보다 우선승계 상속밖 여성차별의 근원... 버려야 할 전통

폭하고 있다. 즉 호주제는 철저하게 부계혈통과 남계혈통만을 우월시함으로써 법적, 제도적으로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다.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이지 관습과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호주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호주제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다. 호주제는 조선 왕조가 받아들인 유교의 종법제에 일제의 천황주의가 결합한 것이다. 일제가 식민 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호주제를 도입했지만 그것이 유교 전통과 맞아떨어지면서 우리 것인 양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물론 일본도 군국주의 잔재라 하여 폐지한 호주제가, 아름다운 전통처럼 가족법 가운데 자리잡은 채 여성들을 차별하는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옛 것이라고 모두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중학생만 돼도 고이 보전해야 할 전통과 하루빨리 고쳐야 할 인습을 구분한다.

호주제에 숨막히는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이 양성 병동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기를 맞이할 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진정 행복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유지



이덕승

안동대 법학과
교수

호주라는 용어가 일제때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의 가장제도에 도달한다. 가장이란 곧 가족공동체의 대표자이다. 딸을 30세가 넘도록 혼인시키지 못하면 가장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이나, 종중제도가 가장을 중심으로 운영된 관습 등을 보면 가장제도는 우리의 뿌리 깊은 전통임에 틀림없다. 일본에 의해 그 이름이나 권한, 책임이 변질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바탕을 둔 것이다.

설사 전통 문화가 아니라해도 사회의 모든 단체는 그 단체를 조정하고 이끌 대표자가 필요하다. 가족도 마찬가지여서 그 명칭이 호주든, 가장이든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남북이산가족이 상봉, 눈물의 바다가 되는 것을 보면 가족공동체에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끈끈함이 있음을

조선시대 가장제도에 바탕 둔 전통 남성 승계 포기면 여성 호주도 가능

알 수 있다.

하버드대가 미국이 21세기에도 세계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 위주의 '나'라는 개념보다는 공동체 의식에 근거한 '우리'라는 개념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 교육목표를 수정했다는 사실을 잘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호주 승계 순서에서 남성이 앞서있기 때문에 호주제가 남성우월주의를 낳는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우리 법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호주 승계 1순위인 남성들이 호주가 되기를 포기하면 여성도 얼마든 호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폐지론자들은 우리 옹호론자들이 꼭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우리 또한 시대에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 호주제가 세계화의 과정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있듯, 호주제도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관을 형성하는데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

남녀평등의 문제 등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더라도 호주 또는 가장제도는 우리의 문화와 국민정서가 변화하지 않는 한 큰 줄기가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본다.

'일본호주제 유입' 다수설... 90년 호주승계제로 개정

■ 호주제의 역사

호주제는 일제때 생겼다는 게 다수설이다.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동로기의 산물인 일본 호주제가 입돼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 옹호론자들은 그것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정한담(鄭煥淡) 전 법학과 교수는 "경국대전에는 구성 단위로 가(家)를, 가의 가장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가로 호(戶)와 호주(戶主)의 라고 말했다.

한문도 있다. 김성숙(金性叔) 법학과 교수는 "조선시대의

호주는 현재의 개념과는 달리 세금 징수나 호구 조사와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일제시대 조선민사령에 근거해 시행되던 호주제는 1960년 제정된 민법에서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호주를 상속하고 호주상속인에게 재산상속 이익을 주며, 심지어 호주가 가족의 거주지까지 정하도록 하는 등 일제시대 호주제의 근간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후 여성계 등의 반발이 이어져 1990년 큰 폭으로 손질됐다. 개정 민법은 우선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바꿨다. 이에 따라 종래 호주상속인은 원칙 않더라도 호주가

돼야했지만 법개정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게 됐다. 분묘 등 제사와 관련된 가족재산의 소유권도 호주 대신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토록 했고 재산상속시 호주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주면 조항도 삭제했다.

그러나 여성계 등은 혼외자(婚外子)를 입적할 때 남편은 아내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나 아내는 남편 동의가 필요한 점 등 차별적 조항을 들어 호주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에는 호주제 관련 조항이 없었다.

/박광희기자 khpari

50세 여성부

내실있는 여성정책 산실 기대

여성정책을 총괄 집행하게 될 여성부 신설은 올해 여성계에 최대의 선물이 됐다. 2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신설되는 여성부는 앞으로 여성정책 집행에 확실한 힘을 실어 주었다. 기존의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법령안제출권이 없어 정책 집행에 한계가 컸다. 이 때문에 자체 법과 행정력을 갖춘 중앙행정부처로의 승격은 여성계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온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지 3년 만에 이루어진 여성부 신설은 '장애물 경기'에 비유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여성부 신설 과정은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의 척도로 삼을 만하다. 여성부 탄생의 의미,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점검한다.

여성정책 전달기구를 하나의 부처로 두는 것은 세계에서 몇 국가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인 조치다. 우리나라는 1998년 유엔 여성차별 철폐보고서가 법·정책면에서 아시아의 모범국가로 소개했을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여성 선진국이다. 그러나 여성부 신설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남녀차별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했던 만큼 현

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부에 줄 권한을 두고서는 의견이 갈라졌다. 연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여성부 신설 문제가 제기돼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여성특위를 중심으로 여성계가 요구한 여성부의 안은 아동·노인복지 등 가족 정책까지를 아우른 포괄적인 기구였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반발로 업무영역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법안을 준비하던 여성특위 공무원들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다가는 여성부 신설안마저 무산될 것 같아 외부의 반발을 피하는 쪽으로 부처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7월 국회상정을 앞두고는 청소년 업무까지 포괄한 여성 청소년부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정책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회됐다.

성차별외 성폭력업무 등 추가 부처간 조정기능·집행력 강화

실은 판단이다. 가부장제적 전통이 강한 국내에서는 교육·고용 등에서의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의 여성비하하는 일일이 따지기 힘들 정도다. 세모를 며칠 앞두고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을 때 경제·교육 부총리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던 야당도 여성부 신설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도 남녀차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월 탄생하게 될 여성부는 남녀차별 개선과 여성인력 개발을 양대 업무로 했던 여성특위의 기존업무를 승계받는 외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윤락행위 방지 등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이밖에 군대위안부 생활지원,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 등이 추가됐다. 내용적으로는 기존 여성특위 업무를 소폭 개편한 정도이다.

여성부 신설의 의미는 그보다는 여성 정책담당기구가 처음으로 법령안제출권을 갖춘 중앙부처로 승격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입법·편견과 맞물려 남녀차별 정도가 심한 지방에까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소독이다. 부처간 정책 조정·총괄기능과 함께 집행력도 강화됐다. 법률이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근거라면 신설 여성부는 근거법이 6개로 '무기'는 충분히 확보한 셈이다.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등 여성특위가 기존에 갖고 있던 2개 법 외에 4개법을 타부처로부터 넘겨받는다.

이상덕 여성특위 정책조정관은 "여성부 신설로 앞으로의 여성정책이 질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여성정책은 무엇보다 여성의 시각으로 보아야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집행의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선기자 weeny@h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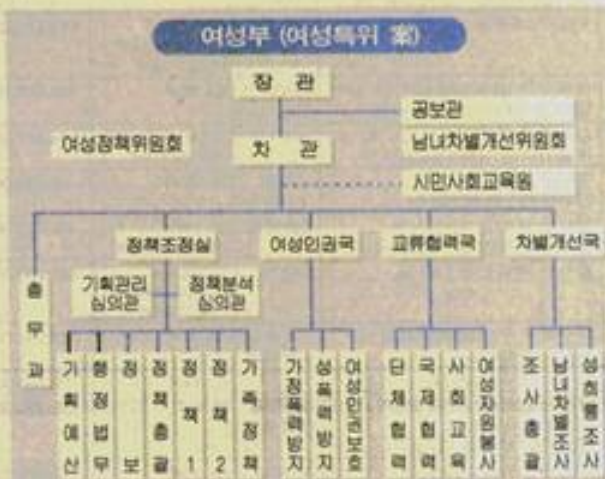
남녀차별 개선 업무는 여성특위에 이어 여성부에서도 가장 주요한 업무로 다루어진다. 여성특위의 남녀차별신고센터. /류효진기자

“허울뿐인 여성부 안되도록” 여성계, 어엿한 규모 요구

1월 출범할 여성부의 규모를 두고 여성특위와 행정자치부 간에 마지막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여성특위가 제시한 여성부 규모는 현재 여성특위의 3배 가량이인 직원 123명에 1실 3국 체제. 여기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급 상당 별정직을 상임위원으로 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현재 여성특위의 차별개선실 업무가 많아진 데다 안전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에서 기구를 확대시킨 것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안은 83명 규모에 1실 2국 체제의 '초미니 부서'로 하지는 것이다. 두 부처의 입장 차이가 커 막판까지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허울뿐인 여성부를 경계하고 있는 여성계측에서는 어엿한 규모의 부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6개 부처에 설치돼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전 부처로 확대할 것과 지방자치제와의 정책 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선조직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성부라고 공무원들이 여성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한 성(性)이 60%를 넘어서 다른 한 성을 소수화해서는 안 된다'는 유연권고안을 감안해서라도 남녀 공무원 비율이 엇비슷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여성특위 내부의 의견이다.

/김동선기자



사회운동 곳곳 '여성 파워'

환경·교육단체 주도적 참여 크게 늘어 정책 개발등 앞장... '생활운동' 한계극복 과제로

지난 3월말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운동단체로는 특이하게 환경운동가들을 공채했다.

이 첫 공채를 준비하면서 환경운동연합 측은 애초에 모두 '남성 운동가'를 뽑겠다는 속셈(?)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주최측의 이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1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뚫고 뽑힌 4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지원한 여성들의 실력이 남성들에 비해 월등히 나왔기 때문에 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환경운동이 이리다가 앞으로 여성들의 독무대가 돼 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환경운동연합 최 열 사무총장의 우려 아닌 우려다.

실무자 공채 휩쓸어

환경운동연합 전체 상근자 26명 중 16명이 여성이며 이런 현상은 '배달환경연구소', '환경과 공해연구소', '푸른 한반도 시민의 모임', '환경사회정책연구소' 등 대부분 환경단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말 여성환경운동가만으로 구성된 '환경을 살리는 여성들'(대표 김경자)도 만들어졌으며, '푸른 한반도 시민의 모임'은 20대 후반 여성 김재남씨가 대표로 있다.

정치적 쟁점중심의 부류가 주류를 이뤘던 우리나라 사회운동이 90년대 들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운동으로 급속도로 바뀌어가면서 사회운동에서 여성 역할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80년대말 공해추방운동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다 현재 캐나다에서 환경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서진옥씨, 국회의원으로 유망하게 환경문제에 대한 집요한 관심을 보이면서 활동하다 영국에서 환경공부를 하고 있는 박영숙씨, 환경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지방의회 의원으로 처음 당선됐던 서울 구로구 구의원 문순정씨 등은 대표적인 여성환경운동가들이다.

직업환경운동가뿐 아니라 단체 회원에서도 여성의 숫자는 만만찮다. 환경운동연합은 8천여명의 회

달라진 여성
달라지는 사회

4



우리나라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을 실질적으로 꾸려나가고 있는 상근자들. 사회운동 구변재성 기자

원 중 여성이 3천명을 넘었으며, 푸른 한반도 시민의 모임은 남녀 비율 4대6 정도로 여성회원이 더 많다.

일반회원도 증가

한살림·서울기독교청년회·경실련·한국여성민우회 등에서 전개하는 '무공해·저공해 식품 나눠먹기'를 중심으로 한 환경살리기 생활협동조합 운동 주체도 대부분 주부들이다.

쓰레기 분리수거, 폐식용유로 비누만들기, 우유팩 모으기 등 생활 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시민환경학교', '환경정책교실', '수요환경특강' 등 환경단체의 교육장을 메우는 여성들...

경북 울진·강원도 고성·경북 영

프장건설 반대운동 등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며 싸우는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이처럼 여성들이 환경운동에 열성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비교적 시간여유가 있는데다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항상 환경문제에 더 가깝게 접촉하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좀더 먼저 눈뜨게 된 것"이라고 환경운동연합 김혜정씨는 분석한다.

1만여명의 전국 참교육학부모회 회원들은 지난 8월 '94년 2월부터 학교에서 육성희비 징수와 육성희구성을 금지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듣고 환성을 터뜨렸다.

교육부의 이 발표는 참교육학부모회가 지난 89년 12월 당시 문교부장관, 사립학교 법인이사장, 육성희장을 상대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육성희비 반환청구소송'이 맺은 실질적인 결실이었다.

이것이 육성희 가입신청서

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육성희에 자동적으로 가입돼 모든 학부모가 육성희비를 내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참교육학부모회가 제기했던 이 소송은 '불모로 잡힌 자녀'들 때문에 악재되기 쉬운 학부모들이 직접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상대로 어렵게 낸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정치·경제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우리 사회의 난제인 교육문제를 풀기 위한 교육운동의 주체도 역시 여성이 주류를 이룬다.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9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학부모단체들은 육성희비 반환요구뿐 아니라 '존치안 주기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국민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 전달제 실시'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동안 교사·교육당국에 의해서만 좌우됐던 교육정책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담아내는데 서

공해 사회운동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전교조의 회원 중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고, 최근 정혜숙씨가 새 대표로 뽑힌 것도 사회운동의 주체로 당당히 서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교조대표 맡기도

산업화의 가속화와 함께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소비자운동은 90년대부터 여성들이 주도 했다.

지난 3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주최한 '플라스틱 사은품의 문제와 대대방안토론을 위한 간담회'에는 제일제당·(주)진주형·삼양사·동방유람(주)·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등 10여개가 넘는 기업의 소비자담당자들이 참석해 김 순 회장과 김재욱 사무처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정전공급했다.

소비자단체들이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 판매업자를 밝혀냈거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 상품을 밝혀냈을 때마다 소비자단체를 앞에서 밀짚는 기업들의 모습을 이런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 '징코민 사건' 등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기업들에 무서운 존재로, 소비자운동을 키우는 데는 여성들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이밖에 좋은 비디오 선정·보급운동이나 좋은 만화 선정운동 등 빠르게 변화해 가는 일반인들의 관심사에 따른 새로운 쟁점발굴 운동의 주체도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서울기독교청년회 남부원 간사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운동이 점점더 새로운 사회를 재구성하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대안문화를 제시하는 운동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여성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면서 자 첫 생활 속 개인실천에만 국한돼 버릴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적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김미경 기자

행복한 노년 “남편들이 달라져야”

김모(62·여)씨는 최근 남편과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다 일을 그만 둔 남편은 젊어서부터 여자관계가 복잡해 김씨의 속을 썩였던 것. 회사를 나가지 않자 집으로 여자전화가 걸려오는데다 가정에서 독단적인 태도는 여전했다. 자녀들과 이웃의 눈 때문에 참고 살았던 김씨지만 이제는 ‘이혼을 하고서라도 여생을 마음편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치밀기 시작했다.

■ 노년부부의 사랑만들기

무시·억압받던 아내들
늘어서 이혼신청 늘어
터놓고 얘기하며
‘감정적 샤워’를

지난해 정년퇴직한 박모(66)씨는 요즘 아내의 냉담이 뼈저리게 느껴진다. 딱히 취미도 친구도 없는 그에게 아내는 ‘제발 밖으로 나가라’고 구박이다. 오래전부터 각 방을 써왔던 두 사람은 이제 식사도 따로 할 정도다. 최근 ‘노인의 전화’에 걸려오는 상담내용가운데는 부부관계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자녀를 출가시키고 두사람만의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젊어서부터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강완숙 사무국장은 “가부장적인 권위가 통용되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갈등이 심해진다”고 설명한다. 사회의 변화에 민감한 여자와는 달리 남자들은 과거와 똑같이 아내를 대한다는 것.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60세이상의 이혼 399건가운데 여성이 제기한 경우가 289건으로 남성이 제기한 110건의 두배가 넘었다.

한편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노인들이 ‘노년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노인의 전화’ 강병만 사무국장은 “그러나 행복한 노년에는 배우자의 존재가 빠질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 이혼을 하거나 사별한 노인가운데는 재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따라서 ‘이혼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아니면 배우자와 더불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부부간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노년부부의 갈등은 대부분 아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지만 남편은 이를 모른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남편이 “그동안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는 말로 위로하거나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준다면 많은 경우 아내의 마음이 녹게 마련이다. 그는 “아내도 남편의 과거잘못을 빨리 잊어버릴 것”을 권한다. 참고 있던 불만이 많다면 두사람이 그동안 쌓인 얘기를 토로하면서 ‘감정적 샤워’를 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노년의 행복에는 평생의 고락을 함께 해 온 배우자와의 화합이 빠질 수 없다. 그동안의 갈등과 긴장을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제공 삼성생명공익재단

할 때는 상대방 의견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는 단계적으로 대화를 하도록 하며 감정이 격해지면 일단 대화를 중단하도록 한다.

부부간의 공동된 목표를 갖는다면 과거에서 벗어나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노년부부일수록 감정의 골이 깊다. 두사람만의 대화가 어려울

때 자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식들이 주선해 두사람이 여행을 가게 하거나 아버지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면 일단 각방을 사용하거나 별거를 해 감정을 냉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김동선기자

dongsunkim@hk.co.kr

기 고

성 경 통

(한림대 교수·사회학)



건설교통부는 최근 김대중대통령에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수도권 입지를 억제하고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요지의 보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장관의 진퇴를 걸고 획기적 조치를 취하라. 대통령의 의지를 살어준다"면서 강도 높은 요구와 함께 강력한 자원의사를 표시했다.

김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98년 4월 건교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부터 획기적인 수도권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초지일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금년 2월초에는 청와대 안에 '지역균형발전기획단'까지 설립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김대통령의 이러한 관심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보고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수

이런 구조 속에서 출세하고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과 기업이 몰려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수도권 집중의 이면에 권력 집중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해야 할 핵심적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구분하여 중앙정부는 전자에 중점을 두고, 후자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분권화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경찰, 교육, 중소기업육성 등 여러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점차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신 증축 억제 차원을 넘어 수도권에 포진한 600여 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부터 지방으로 재배치하는 강도 높은 분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

權力나뉘야 지방발전 길트여

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들이 고작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신 증축 금지, 공공기관의 수도권 내 민간 건물 임차 금지, 몇몇 보건기관의 지방이전 등과 같은 지엽말단적 처방에 불과했다. 이미 수도권에 터를 잡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매우 안이한 태도가 고스란히 깔려 있다.

실효성 있는 수도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46%의 인구, 55%의 제조업체, 82%의 정부 및 공공기관, 95%의 대기업 본사가 밀집하게 된 구조적 원인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이에 기초해 정부기관부터 지방이전의 모범을 보이는 근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머리는 깎지 않고 남의 머리만 깎으려는 허무명량론 정책을 남발해 결국 비웃음을 사게 된다.

수도권으로 사람 돈 일자리 등이 몰려들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과도한 중앙집중에서부터 비롯됐다. 주지하듯 조선조 이래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모든 권력을 독점한 고도의 중앙집권체제를 발전시켰다.

토권의 정책을 총괄하는 건교부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살신성인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타 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에 대해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도권 정책의 핵심은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대거 분산시키는 데 있다. 집권국가와 집중사회를 '분권국가 분산사회'로 바꾸는 국가개혁 차원에서 수도권 정책에 임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권력과 자원이 하나의 중심으로 집중되던 산업사회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가져오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정치적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이 둘러싸인 한반도의 어느 곳도 전략적 중요성을 갖지 않은 곳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만 경쟁력을 가지면 된다는 식의 좁은 생각으로는 수도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장래를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전망도 제시할 수 없다.

장명수 칼럼

(2143)



삶과 가족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 적병기에 결혼하여 해로하면서 아들 딸 낳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모범답안'이라는 생각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99년 인구동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출산 감소다. 가임여성 1인당 출산아수(출생률)는 1.42명으로 미국(2.06) 캐나다(1.66) 프랑스(1.75)보다 낮고, 일본과 독일(1.34)보다 높다. 산아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했던 1960년의 출생률이 6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다. 1970년 100만 7,000명이던 신생아수가 99년에는 61만 6,000명으로 줄었다.

이대로 가면 2015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2020년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노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부양해야 할 점

는 것, 현대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가족문화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 여자의 의식은 변했는데 남자의 의식은 전통에 머물러 서로 조화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젊은 여성들의 결혼기피를 노인문제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서 보통 3~4명 이상의 노인(친정부모+시부모+조부모까지)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흔한데, 그런 과중한 부담이 결혼을 기피하게 하고, 이혼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일본의 노인시설 부족이 여성들의 결혼기피와 이혼증가, 인구감소를 가져오는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다.

정부와 사회가 여성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산기피에 이은 결혼기피 현상이 큰

왜 '출산 기피'인가

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국력쇠퇴와 노화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산을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아예 독신으로 살겠다는 숫자도 늘고 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내쪽에서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직업을 갖고 직업을 통한 자기성취를 중시하는 오늘의 젊은 여성들은 직업과 육아의 양립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되면서 자녀갖기를 포기하고 있다.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에게 아기를 맡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탁아시설은 부족하고, 육아비용과 유아교육비는 엄청나게 치솟고, 무엇보다 직장 생활에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에서 젊은 여성들은 엄마가 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젊은 여성들의 출산기피와 함께 결혼기피 현상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문제 전문가들은 결혼기피의 이유를 여러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여성들이 누구나 직업을 갖고 자기자신을 부양할수 있는 경제력을 갖게 되었다

문제가 되고, 결혼기피는 인구감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출산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왜 여자들이 아기 낳기를 꺼리는가를 생각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김대중정부는 역대 어느정부보다도 여성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 진출을 늘리고 자위를 향상시켰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탁아시설은 제자리 걸음이고, 아이를 가진 직업여성들은 직장 가정 사이에서 비명을 울리고 있다. 또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남자들의 의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인구감소는 심각한 문제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일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성의 의식은 크게 변하고 있다. 여성들은 '엄마'가 되는 것보다 자기자신의 발전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엄마가 되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왜 엄마되기를 겁내는가 이유를 찾으면서 엄마들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발행인 mschang@hk.co.kr



격변의 공직사회

〈끝〉

"남자직원의 2~3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밤을 새워 일한 적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공무원 경력 31년인 중앙부처 S과장) "보직을 주면서 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을 낸다. 지방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왜 여성에게 주요 과장을 맡겼느냐고 따질 정도다."(7급 공채로 들어온 모 지방자치단체 P과장)

인사·감사·예산등 禁女의 벽 무너져

공직에 몸담은 여성들은 괴롭다. 관직을 남성들이 독점해 온데다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의 전통이 뿌리깊어 관리직 진입 장벽이 너무 두껍기 때문이다. 89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채용시 여성비율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임용령이 이를 여실히 말해준다.

조직에서 적응하고 승진하기 위한 몸부림도 애처롭다. 부서의 마스코트 역할을 자임하는 '여원형'에서 '어머니형' '유혹형' '철의 여인형'(캐터 교수 분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헤쳐 나가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열과 성취욕은 매우 높는데 비해 행정관리직 진출은 필리핀이나 태국은 물론 이슬람권인 쿠웨이트보다도 저조하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간한 99년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과 경제활동 등 남녀평등 차원에서 여성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한 여성개발지수(GDI)는 143개국 중 30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반면 의회진출과 행정관리직 비율 등을 감안한 여성권한척도(GEM)는 102개국 중 78위로 하위권이다.

공직에 진출해도 하위직에 대거 몰려 있어 조직에서 발휘하는 영향력도 미미하다. 98년 말 현재 여성공무원 비율은 29.7%(26만3,853명)지만 행정부 일반직 가운데 1급은 한 명도 없고 2급에만 3명(0.7%)이 있을 뿐이다. 과학기술부 등 7개 중앙부처와 25개 지자체에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한명도 없다.

그러나 최근 고위직이나 인사·감사·예산 등 남성들이 장악해온 주요보직에 여성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행자부는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각 부처와 자치

■ 글심는 순서

1. 철밥통이 깨진다
2. 빗장풀린 관료제
3. 연봉제는 '직급파괴제'?
4. NGO가 들어다본다
5. 공직에도 우먼파워

5급여성 1명이상 배치

부처·자치단체에 의무화
남성들 "역차별" 반발도

● 여성 행정관리직 비율

이탈리아	53.8%(26)
미국	44.3%(8)
필리핀	34.8%(45)
싱가포르	34.3%(32)
노르웨이	30.6%(1)
태국	20.4%(64)
멕시코	19.8%(33)
칠레	18.5%(54)
이집트	18.4%(86)
중국	11.6%(40)
일본	9.3%(38)
쿠웨이트	5.2%(72)
한국	4.2%(78)

()안은 여성권한척도 순위

단체에 5급 여성공무원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고, 여성이 없는 기관에는 6급 공무원 중 여성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성들의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P사무관은 "군가 산점제도가 폐지된 마당에 여성을 우대하는 채용목표제(2002년까지 5·7급의 20%)를 시행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내놓고 말은 않지만 동료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여성특위 박숙자(朴淑子) 정책연구위원은 "여성이 관직을 갖는다는 것은 능력이나 적성에 관계없이 크게 제한돼 왔다"면서 "여성들도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를 강화하고 승진할 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21세기와 여성

박영숙

〈사랑의 친구들 총재〉



'21세기, 이제는 여성!' 이것은 지난 7월 한국의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5회 여성주간에 주제의사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남북의 화해무드가 싹트고 있는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성의 지혜와 잠재력을 결집하여 21세기를 한민족의 기회의 세기로 만드는데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다짐을 담고 있다.

최근 한국언론이 70세의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1,000억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낸 일을 보도하면서 공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이혼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00년 판 사업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하

여성의 사회참여가 큰 폭으로 진전되고 있는데 역으로 세계의 순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뒤쳐지고 있는 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눈부신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에서는 여성대통령이,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의회 참여율이 50대50으로, 일본에서도 작년에 10여명의 여성부지사를 내는가하면 금년에는 여성지사가 선출되는 등 21세기를 여성의 세기로 만들어 가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현재 국가 원수나 정부수반을 맡고 있는 여성은 8명에 이르고 있다.

여성의 정계 및 공직진출 부진,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48.2%), 불안정 고용증가 및 여성의 빈곤화,

한국여성 지위 향상되고 있는가

루평균 113쌍 꼴로 이혼소송이 제기됐으며 피고 중 남편비율이 10년 전(43.0%)에 비해 21.2%가 높아진 64.2%에 달해 아내 쪽이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보다 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기사는 1999년 전국 각 법원에서 재판으로 처리된 남녀 60세 이상인 부부의 황혼이혼건수는 102건으로 98년 85건보다 20%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황혼이혼'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60, 70대 이상 여성들에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남편과 시집과 자녀만을 위해 자기희생을 강요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온 세대이다. 이들에게 인간이라는 자각, 자신도 귀한 존재라는 깨달음은 단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에서 지난달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여성의 정치, 경제적 의사결정 참여도를 나타내는 여성의 권한 척도는 조사대상 70개국 중 63위이다. 99년은 102개국 중 78위, 98년은 83위이었다. 비율로 보면 우리 여성은 권한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국민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측정한 인간개발지수가 174개국 중 31위인데 비해 여성권한척도가 63위인 것에서 보는 대로 한국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인습에 가까운 가부장적 가치관(호주제도 등), 극심한 여성의 상품화, 가정폭력의 증가, 여성의 정보 결핍현상 등은 21세기 한국 여성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게 한다. 이러한 현실은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혼란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많은 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버림받아 태어나지도 못하는 현실, IMF 상황에서는 한가정의 생계를 담당해야하는 여성가장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영순위로 처리하는 일,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일을 해도 진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 아내는 남편과 같이 직장에서 돌아와서도 남편시중과 가사를 떠맡아야 하는 일 등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 한국에 태어난 여성들이 발 딛고 있는 현주소이다.

그럼에도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권리 찾는 일에 용단을 내릴 만큼 여성의 의식 변화와 보수적인 법조계와 언론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일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보면서 새 세기의 여성계 움직임의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를 지적한다면 이제는 여성 문제는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해결해내겠다고 하는 점일 것이다.

모성보호법안 재계·여성계 공방 가열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태아검진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모성(母性) 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성계와 재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성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입안한 개정안이 30일 폐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심의유보 및 입법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 “기업 부담커 여성채용 기피”

여성계 “비용 사회분담엔 문제 없어”

경제5단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없는 태아검진휴가 등을 도입하면 연간 8,500억원의 기업 부담이 늘어나 경제활성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경총은 2001년 여성 근로자 통상임금을 91만2,291원(임금인상 5% 반영)으로 추정했을 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에게는 출산휴가급여 30일 추가분 529억5,000만원, 육아휴직급여 7,650억5,000만원, 유급 태아검진휴가 358억원 등의 비용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총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생리휴가 자체가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특히 이를 유

육아휴직 급여지원
고용보험 취지 어긋나
생리휴가 먼저 없애야

급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에서 또다시 태아검진 휴가까지 도입하는 것은 기업에 과다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쫓기는 기업의 속성상 비용부담을 추가로 안기보다는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을 피하는 결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경총 김영배(金榮培) 전무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를 신설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기금 예산과 기업부담이 수반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제 수준의 모성보호를 도입하려면 우선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생리휴가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노동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23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모성보호 관련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여성계는 “여성노동법 개정안은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등의 사회분담화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는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추가 비용은 경총 등 재계가 상정한 것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여

여성계

‘8,500억 추가부담’

재계 산출은 과대추정

기업전액부담은 반대

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여성계는 출산휴가 연장에 427억원, 육아휴직 632억원, 태아검진휴가에 307억원 등 1,366억원이 필요하다고 계

산했다. 재계가 산출한 추가 비용 8,500억 원은 출산한 여성 노동자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노동자 전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이라 전제 아래 육아휴직 비용을 7,650억 원이나 포함한 것으로 모성보호 관련 비용을 과대 추정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성계는 모성보호비용을 기업에 전담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국가일반재정에서 출산휴가 확대에 따른 추가 30일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등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단체연합 김기선미 정책부장은 “여성의 출산은 미래의 노동력을 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이므로 사회제도적으로 모성보호 및 여성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항란기자 iami@hk.co.kr

■ 모성보호법안이란

출산휴가 90일로 확대 월1회 태아검진휴가 신설

가칭 모성보호법의 핵심은 산모의 건강을 위한 것과 육아 지원책을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산휴가를 현행보다 30일 늘리고 유급 육아휴직 및 태아검진을 위한 월1회 유급휴가 신설 등이 그 골자다. 현재 기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60일의 출산 휴가를 90일로 늘리고 확대되는 30일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회가 분담하자는 것이다.

현재 아기가 만1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유·무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거의 무급으로 이뤄지고 있는 육아휴가를 월2만원분의 유급휴가로 하되 고용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두 번째 주요내용이다. 세 번째로는 임신이 확인 여성에게 월1회의 태아검진 유 휴가를 지

● 출산휴가 국제 비교

국가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	비용 부담
미국	12주	유급	-
일본	14주	60%	사회보험
영국	17주	100%	미만 사회보험
독일	14주	100%	사회보험
프랑스	26주	100%	사회보험 (급여 상한)
ILO협약 (12주에서 14주로 100%)		2/3	사회
한국	60일에서 90일로 (개정 추진)	100%	

(자료: 경

급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간을 특정했지만 유산이나 사산 에게도 유급으로 휴 도 포함돼 있다.

/황영조 기자

25일 여성개발원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85만 6,689~102만 6,169원)은 여성 근로자 평균임금(86만 6,570원)이나 도시일용직 노임(73만 3,106원)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업주부의 노동력이 그동안 과소평가되었음을 말해준다.

유엔이 국제 여성의 해인 1975년 세계행동강령을 채택하면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국민소득계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시도가 시작됐으나, 국내는 거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여성개발원이 이번에 낸 연구 보고서는 앞으로 전업주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불과하다.

전업주부의 상해 보상, 이혼시 재산분할, 보험료 산정 등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도시일용직 노임으로 간접적으로 전업주부의 노동력을 평가해왔다. 여성계는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여성의 지위향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업주부가 육아, 요리, 빨래, 청소 등 '아무리 해도 표가 나지 않고 하찮아 보이기만 하는' 가사노동 활동에 들이는 시간은 연령별로 3시간 39분~7시간 10분. 전업주부의 한달 가사노동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국민총생산(GNP)에 가사노동의 가치를 대비할 때 전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기회비용법에 의하면 102만 6,169원이다. 근로자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가사노동시간을 환산하는 방식이다. 가사노동의 활

주부 노동가치 평가 '첫발'

상해보상등 새기준 기대

■ 여성개발원 발표 안팎

동별 전문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전문가대체법을 적용하면 95만 8,555원. 파출부 등 가사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종합적대체법으로는 85만 6,689원이다.

현재 법적 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출하거나 보험료를 책정할 때 전업주부의 노동력은 도시일용직노임을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여성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16.2~40% 더 높게 책정돼야 한다.

특히 20대와 30대 전업주부가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가사노동이 많았다. 하루 가사노동이 각각 7시간 10분과 7시간.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사노동 시간은 줄어든다. 여성개발원 김태홍 노동·통계연구부장은 "20~30대 주부들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육아의 비중이 줄어들며 따라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시간은 20대가 2시간 46분, 30대가 1시간 34분이었다. 김 부장은 "육아 등 가사에 대한 부담이 20~30대 주부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해석했다.

이에 반해 40대부터는 육아 부담이 줄면서 가족을 보살피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40대 주부들은 요리, 청소, 빨래, 쇼핑 등에 하루 5시간 6분이나 쓰고 있다.

보고서는 여성의 생산적 활동이 1일 평균 6시간 54분으로, 남성(5시간 59분)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여도를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은 전체 생산적 활동에서 유급 노동이 86.4%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44.8%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항란기자

한국 논단



채 서 일

현대사회를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부른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동안 우리의 무기는 우수하고 성실한 인적 자원이었다. 현재 겪고 있는 정치·경제적 어려움은 우리 인력구조의 경쟁력이 한계에 와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제 우수인력의 폭을 두텁게 하고 질적 혁신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보유한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인력은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성비(性比)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남자아이들은 이미 여자 짝궁 품귀현상을 겪고 있고, 이들이 성장한 2010년경에는 결혼적령기의 남자 100명중에 19명이 짝가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계보고도 나와 있다. 성비 불균형의 문제는 아들을 낳으려는 부모들의 욕심 같은 개인적인 문제로 지적되지만 이는 훗날 장가를 가고 못가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유형 무형의 사회적 제도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는 호주 상속권이 없다. 이 점은 여성이 독립적인 개체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사회통념상 여성의 책임으로 남아 있는 가사노동이나 육아문제도 사회진출을 원하는 많은 여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뜻있는 이들의 노력으로 법조항 개정등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 효력의 발휘나 운영면에서는 미흡하여 그저 법조문상의 평등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도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

현대사회는 갈수록

유연·섬세함을 요구

21C 국가경쟁력은

여성능력에 달려있다

성비불균형이 심화하면 전쟁이 발생하거나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결국 그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부모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가치없이 태대의 딸들을 기려내어 죽이면서까지 아들만을 버려도록 만드는 것일까. 조선시대 이후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 유교사상의 영향인 뿌리깊은 아들선호사상도 큰 원인이다. 가문의 대를 이어 나가고, 일생동안 이룩한 성과를 물려주는 대상은 아들뿐이라는 생각이 우리네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부모들 마음속에 이미 세상만사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획득되어 자리잡고 있는 것도 아들을 선호하게 되는 강력한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 아마 자신의 인생 역경에서 여성 차별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성비 불균형을 낳고,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씨를 잘라버리는 결과를 만든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요소는 법이나 관습같은

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불이익에 무관심하며, 왜 그런 일에 마음을 써야 하는지 의심을 품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좀더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알 수 있다.

현대사회는 소프트화·다양화·개성화함에 따라 유연하고 섬세한 감성을 요구한다. 유연함과 섬세함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우월하게 보유한 특성이다. 다가오는 미래는 3F의 시대라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여성스러움(Femine) 감성(Feeling) 가상(Fiction)이 그 내용이다. 실제로 근래의 불황속에서도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은 그 72%가 매출증가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한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그 사회의 여성인력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 점차 현실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여성과 권익이 많이 신장되었다는 선진 각국들도 여성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경제인 지원법이라든지, 정부 구매물량의 일부를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에 할당한다든지 그 형태는 다양하다. 혹자는 이런 지원은 남녀 평등의 단계를 넘어 남성차별이 아니냐는 불평을 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 속에서 생태적인 감성이 다른 여성들은 그 능력발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물리적인 힘이 명위를 떨치던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의 시기를 지나 이제 바이오토포소프트한 것들이 힘을 발하는 정보혁명의 시기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 시기는 여성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여성인력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 가능성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蔡瑞一·고려대교수·경영학)

모실 노인 늘어난다



32년뒤엔 노령인구 20% 일하는 젊은층 부담 급증

다가선 高齡化사회

고령화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입은 늦었지만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전반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령화 실태=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1%로 선진국들에 비해선 여전히 작다. 세계 최고인 이탈리아는 18.2%에 달했고,

국민연금 개혁 없으면

소득 19% 낼 수도

일본 17.1%, 독일은 16.4%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다. 22년 후인 2022년에는 우리나라도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2032년에는 20%에 달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또 14세 이하의 유년인구와 비교한 노령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올해 32.9%에서 2010년엔 49.9%, 2030년에는 무려 1백20.3%에 이를 전망이다.

노령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생산 가능연령인구(15~64세)는 1999년 71.4%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 2030년에는 64.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화옥(鄭花玉)통계청 인구분석과 서기관은 "프랑스·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고령화가 완만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고갈이 걱정=일하는 젊은이들이 노령인구 부양을 위해 들어는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현재 근로자 1인당 급여의 9%씩 때는 국민연금 부담액을 2030년이 되면 19%(보건복지부는 2040년대 중반 이후 12~14% 상황조정 전망)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계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5분의 1을 국민연금으로 떼야 하는 셈이다. KDI는 이에 따라 연금 부담액을 미리 올리거나 받아가는 연금 급여를 줄여나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도록 기업연금 등 각종 사적 연금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노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소외계층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복지 서비스도 넓혀나가야 한다.

최성재(崔聖載)서울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8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시스템 개선해야=나이를 먹어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도 늘려나가야 한다. 이는 노인들 스스로 어느 정도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면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고령선 KDI연구위원은 "일할 의욕이 있는 노령인구를 위해 기업이나 정부의 정년개념을 점차 바꾸고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기·서경호 기자

<kikwk@joongang.co.kr>

전업주부 노동가치 月85만~102만원

■ 여성개발원 산출

일용직노임보다 20%높아

전업주부의 한달 가사노동은 85만 6,000~102만 6,000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 노임보다 20% 정도는 상향조정 평가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관련기사 23면

한국여성개발원은 25일 발표한 '여성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정책과제'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월평균 최저 85만 6,689원, 최대 102만 6,169원이고, 1999년 기

■ 전업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시간 (단위=시간:분)



(한국여성개발원 자료)

준으로 558만명의 전업주부들이 연간 70조 9,000억원 규모의 무급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란기자 iam@hk.co.kr

☞ 2면에 계속됩니다

☞ 1면 '주부 가사노동'서 계속

여성부는 주부의 무보수 노동가치를 평가해 보험료 산정과 배상금 지급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올해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여성부는 현재 소송이나 보험 등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 정부노임 단가를 이 연구 결과로 대체할 것을 추진 중이다. 1999년 기준 도시 일용직 노임은 월 73만 3,106원으로 여성개발원이 산출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이보다 16.9~40% 높다.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알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남성운동협 "여성부위헌" 헌소



○...한국남성운동협
의회는 10일 "여성부
가 성대결을 조장하

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여성부의
설치근거가 된 정부조직법은 위헌"이
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협의회는 소장에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면
서 "여성부는 성을 이유로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한 것으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
했다.

/박진석기자

남성협 "여성부 설치 性대결 조장" 憲訴

2003-1-11



▽...임의 단체인 한국남
성협의회 회장인 이모씨 등
3명은 10일 "성 대결을 조
장하는 여성부의 설치 근거

가 된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라며 헌
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씨 등은 소장에서 "정부는 여성
에 대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성
부를 신설했다고 하나 남성이 여성
을 차별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
다"며 "오히려 모자보건법, 모성보
호법 등 여성을 위한 법은 존재하나
남성에 관한 특별법은 한 가지도 없
는 상황"이라고 주장...

호주로 태어난 죄가 무엇일까.

김아무개 여인은 남편의 음주병과 심한 가정 폭력으로 몇 해 전 이혼한 뒤 아이들과 단란하게 살고 있다. 아이들은 남편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고 본인은 다시 호주인 친정 오빠의 호적에 올라섰다. 다행히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친정에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따로 나가 잘 살고 있다.

그러나 조카들이 성장하자 김씨는 오빠네 식구에게 괜히 미안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적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오빠 가족에 대한 괜한 오해를 부를까봐 가시방석에 앉은 듯하다.

더구나 조카들의 혼기가 다가올수록 형여 자신의 이혼 경력이 혼사에 영향이라도 주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된다. 또한 나이가 든 오빠가 사망할 경우 장조카를 호주로 모셔야 될 판이다.

과연 이게 이른바 문명사회에서 유효한 말인가. 김씨의 사례는 요즘처럼

독신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세상에서 호주를 승계한 수많은 집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말 못할 고민거리의 하나일 뿐이다. 이 모두 일제 때 우리 민족을 수월하게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세계 유일의 호주제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여전히 호주가 되면 상당한 권위와 물질적인 혜택이 뒤따랐으나, 그것도 이제는 옛말이다. 여전히 호주제 옹호에 적극적이신 분들께 말하고 싶다. 이 땅에서 호주를 승계할 장남으로 태어난 수많은 당사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라. 과연 호주 승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나 되는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일제시대의 낡은 망령인 호주제는 이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 사회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를 이미 한참 놓치고 있다.



안형자/
군산여성의전화 회장

여성차별 경제 발목잡는다


UNFPA

유엔인구기금 실태 고발

‘여성 차별은 경제 성장에도 재를 뿌린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확대는 당사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힐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세계인구상황보고서’가 2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여성 3명중 한 명 꼴로 배우자나 가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경우 연간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기성세대가 여성의 지위에 대한 고정 관념을 어린이에게 심어 놓으면 이를 바꾸기 어렵다”면서 “초등교육 강화와 법규 제정을 통한 여성 권리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명중 1명 가족에 맞아

▽여성 차별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져오는 직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다.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피해자와 의료비 발생, 직장 결근, 경찰 보호 등으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경우 여성 폭력 피해자의 결근이 가져오는 생산성 저하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연간 40억달러나 될 정도.

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여성의 지위 향상의 상관관계도 밀접한 편이다. 보고서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8%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데는 유아사망률 감소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여성에 대한 가족계획 교육이 확대되면서 유아사망률이 60% 이상 감소했

배우자로부터 육체적 폭력을 당하는 여성 비율(단위%)



으며 이는 지난 30년간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을 1525달러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

美 年 4조8000억원 손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중등학교 진학비율은 남성의 50~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 기여도에서 볼 때 여성에 대한 교육 투자는 남자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여성의 교육기회를 늘리게 되면 사회에 진출하는 고학력

여성의 비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가사에 종사하는 여성이 자녀 교육과 보전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 보고서는 여성의 중등학교 진학비율을 1%만 높여도 0.3%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섹스산업 年 400만명 팔려

▽여성의 폭력 피해—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교육기회가 늘고 있음에도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400만명 이상의 여성이 섹스산업을 위해 국제적으로 매매되고 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80만명 정도가 15세 미만의 소녀라는 것이 보고서의 추산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특히 아시아와 이슬람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로 기혼여성 인구의 47%가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태 성병 에이즈 등과 관련된 여성의 건강 악화도 심각한 문제. 낙태로 인해 사망하는 여성은 1분에 1명 꼴로 매년 전 세계 임신 여성 중 3분의 1 정도인 8000만명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있다. 8000만명 중 2000만명 정도는 위험한 낙태 수술을 감행하며 이로 인해 숨진 여성은 지난해 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에이즈 환자도 여성이 남성보다 200만명이나 많다.

▽교육 강화—94년 이집트에서 열린 국제인구개발회의에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규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적 보호장치와 함께 교육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성과 출산에 관련된 교육을 늘리며 여성 교육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삶과 생각

강이수

상지대
인문사회대 교수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딸아이는 요즈음 위인전에 관심이 많다. 늘상 야기인 것만 같았는데 이제 서서히 자신의 역할모델을 찾아가는구나 하고 대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게 웬걸... 우리는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딸아이는 유독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 위인전을 읽고 싶어 하는데, 집에 있는 만화 위인전과 위인 전기집을 통동원해도 읽을 수 있는 책이 몇 권 되지 않는 것이다. 신사임당, 유관순, 헬렌 켈러, 퀴리 부인, 나이팅게일 그리고 용감한 잔다르크... 그렇게 전부였다.

나는 가끔 수업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여자위인 찾기'에 나서 본다. 학생들이 외울 수 있는 남자 위인은 끝이 없다. 그래서 중단하고, 여자 위인

20명만 찾으면 수업을 일찍 끝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을 내걸어 본다. 성년이 된 대학생들은 마치 유치원 아이들처럼 신이 나서 여자 위인의 이름을 외

치다가, 7~8명이 남아서면 주춤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기억하려 해도 기억나지 않는 미궁을 헤매다가 '삼천궁녀'라는 외마디로 끝나버린다. 수업은 계속되고, 씁쓸한 기분이 된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여성의 삶과 생애는 여성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예견되는 21세기에 도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최근 여성의 삶을 복원에 내리는 학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커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의 갈

피마다 배어 있을 여성의 활동을 조명하기에는 기록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남자의 글과 책 속에 묻혀버린 여성의 목소리와 삶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여성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선부론 예견만으로 여성이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신사임당'만으로 역할모델을 한정하기에는 요즈음의 여자 아이들은 더욱 더 도전적이고 총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사회적 역할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여자아이들이 수많은 동화 속의 '공주들'과 더 빨리 친근해지는 것도 사

원주에서는 조선시대에 꽤 높은 수준의 성리학 이론을 설파하고 유교집을 남긴 임윤지당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인근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 의병장이었던 윤희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반가운 일이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더 많은 여성의 삶을 불러내야 한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 도전하고 승리했던 여성들에 대한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인 것이다.

세계 여성 위인 전집을 만드는 일은 어떻게?
영국 참정권 운동 지도자 뢰크허스트, 의사이자 초등 교육의 개척자 마리아 몬테소리, 가부

장재에 대한 저항정신의 소유자 허난설헌, 피임 보급에 앞장 선 마거릿 생거, 지칠 줄 모르는 탐구욕의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 현대무용가이자 안무가였던 마사 그레이엄, 일제 식민지하의 꽃 같은 여성노동운동가 강주룡.

위인전집 앞에서 힘겹게 '여자위인 찾기'를 하는 작업을 멈추고 이 든든한 버팀목에 기대어 자신의 꿈과 소망을 펼쳐 갈 우리 딸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여성위인 전집을 꿈꾸며

실이다.

환상적인 결혼에 대한 기대 앞에서 자신의 꿈과 소망을 쉽게 접어버리는 여성이 아직 많은 것도 적절한 역할모델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독특해진 공주'만으로는 미래를 여성의 것으로 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여성에 다가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의 위대한 여성을 발굴하고 선양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내가 사는

집중추적
오늘의 이슈

'권력' 있다고 性희롱 꿈도 꾸지마

경기 과주시에 있는 K산업의 P사장(42)은 퇴근 후 여직원 L씨(25)의 휴대전화에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남겨두곤 했다. 토요일인 7월15일 밤 12시경에도 휴대전화로 "만나주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말라"고 말하다 거절당하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25개 이상 남겼다.

L씨는 연휴가 끝난 뒤 18일 출근해 P사장에게 따졌으나 그는 "술에 취해 그런 것"이라며 일버무렸다.

서울 노원구 P복지관 L관장은 인사를 안한다는 이유로 여성 사회복지사들의 영입을 때리거나 결혼한 복지사들에게 "결혼 후 비실거린다"고 말하곤 했다. 또 회식자리마다 이들에게 술을 따르게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사회복지사 S씨(27) 등 5명은 3월말 집단사표를 내고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위(위원장 박경남·白京男)는 8일 '남



녀차별 및 성희롱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사건에 대해 남녀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여성들 "당하지 않겠다"
적극적 법에 호소 증가

시정 권고했다. 이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역시 남녀차별의 한 유형이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여성특위에 시정을 요구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남녀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여성특별위원회의 월별접수



성희롱과 성폭력을 포함해 남녀차별사항으로 접수된 사건은 모두 1208건. 이중 지난해 7~12월 6개월간 성희롱건수는 17건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1~8월 8개월간의 건수는 71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성특위 조진우(趙鎭宇)담당관은 "직장내의 성희롱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지 일자리를 잃을까봐 당하고만 있던 여성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법에 호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희롱 성폭력의 심각성은 이들 사건이 '권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K산업의 P사장이나 P복지관의 L관장은 피해자들의 고용이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또

작년 6개월간 17건 신고
올 8개월간 무려 71건

이날 함께 성희롱결정이 난 '충남 ○○대 교수와 여대생 성희롱' 사건 역시 권력 내지 상하관계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여성문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장원(張元)전 총선시민연대 대

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6월 한달간 설정한 특별신고기간과 상반기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회지도층에 의한 성폭력이 10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가해자의 직업은 기업인(35.9%) 교육자(26.5%) 성직자(14.2%)의 순이었으며 공직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각각 7.5%를 차지했다. 피해자와의 관계도 절반이 직장상사와 부하직원(51.8%)이었으며 교육자-제자(26.4%) 성직자-신도(14.2%) 전문직종사자-고객(7.6%)의 분포를 보였다.

상담소는 "성폭력은 그들의 권력 및 권위 때문에 그간 은밀히 자행되고 은폐돼 오다 피해자가 신고에 나서면서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은 성관계가 아니라 권력관계이며 감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삶과 생각

강 이 수

상지대 인문사회대 교수



지난 여름 나는 놀라운 기록물을 발견하고 발독하느라 평상시보다 많은 땀을 흘려야 했다. 엄청난 분량의 그 기록물은 평범한 시골 아낙네의 일기였다. 강원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너른들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그 곳에서 태어나 200m 앞에 있는 집에 시집가서 지금도 그 곳에 살고 있는 분이다.

초등학교 시절 꽤 영민한 소녀였던 할머니는 그 시대 여는 여성처럼 진학의 꿈이 좌절되자 자신의 모든 꿈과 열정을 일기에 담아 쓰기 시작하였다. 누런 시험지를 색실로 묶어 단기 4288년(1955년) 6월 15일부터 시작된 일기는 2000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써나간 할머니의 일기 분량은 55권에 달하고 있다. 약간 과장하자면 어른 앉은 키 만큼의 분량이다.

일기 내용의 많은 부분은 썩썩하고 부지런한 한 여성의 엄청난 노동의 기록이라고 할 만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살림의 주요 구성원이 된 소녀의 누에치기, 감자 캐기, 밀 베기,

담배잎 고르기, 모심기, 실고추 만들기 그리고 새참해 나르기로 이어지는 매일의 일과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 20대 전후에는 고원 가정사 중에서도 외롭고 고독해지는 처녀의 갈팡질팡한 심경을 토로하거나, 또 민의원 선거, 새마을 운동, 빈부의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소견이 녹아있기도 하다. 할머니는 이 모든 노동과 삶의 여정을 기꺼이 감내하였고, 현재는 아들, 딸 전부 혼사 시키고

할아버지와 다복하게 살고 계신다.

이 일기를 보며 느낀 소감은 처음에는 꼼꼼하게 자신의 삶을 기록해나간 할머니의 열정에 대한 감탄이었지만, 일기를 넘기면 넘길수록 평범한 한 여인이 일생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새삼스런 확인이었다. 함께 자료를 찾으러 간 남성 경제학 교수는 일기에 대한 소감을 우선 자신이 남성인 것에 감사하다면서, 일기는 시대가 여성에게 얼마만한 노동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여성잔혹사'인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일하고 노

력해 온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없이 일하고 노력해온 여성들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토요일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는 '2000년 세계 여성 대행진 한국대회'라는 행사가 열렸다. 대회 주제는 빈곤과 폭력을 추방하고,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151개국 3,000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참여하여, 오른쪽 발을 앞으로 박차고

내밀어 걷는 것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여성들의 전지구적 자매애의 강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빈곤의 문제가 여전히 새로운 세기의 화두여야 하는가에 대한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빈곤의 문제는 20세기에 끝났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던가.

신자유주의의 파고는 세계 각국의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빈곤의 여성화'라고 할 정도로 여성들을 더욱 불리하고 어려운 생활로 내몰고 있다.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는 전세계 12억 인구 중 70%가 여성이며, 유엔인구기금의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여성의 3명 중 1명은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현재 여성은 전세계 산업 노동력의 절반

이다. 또한 그 나머지는 할머니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없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가난하다.

세계 곳곳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삶을 일구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온 많은 여성들이 노동한 만큼 인정받고 빈곤에서 보다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대행진이 힘차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새삼 할머니의 일기를 되새겨 본다.

어느 할머니의 '여성 노동일기'

전북 군산 대명동 '쉬파리골목' 화재 현장에서 숨진 매춘 여성 다섯명의 장례식이 죽은 지 열이를 만인 지난날 30일 치러졌다. "그리웠어, 세상에 온기를 가진 그 무엇이 라도 그리웠어,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자유 ...," 이 자리에서 낭독된 추도시의 첫머리는 이러했다.

죽어서야 얻은 자유

"살고 싶다. 정말 살고 싶다. 사람답게 여자답게 살고 싶다." "도와 주세요,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이걸 아닙니다."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친다. 그러나 치면 칠수록 항상 제자리. 정말 이럴 땐 딱 죽고 싶다." 이번 화재로 숨진 임아무개씨의 일기 대목이다.

쉬파리골목 화재참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잔혹하면서도 위선에 찬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매춘 여성들이 당하는 절망적이고도 참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고발한다. 화재현장부터가 그렇다. 불이 난 2층 창문에는 방범창이 설치돼 있어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고,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비좁아 사람 몸 하나 제대로 빠져나갈 수 없게 돼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유일한 출입문인 1층 문은 이중으로 돼 있고 밖에서만 잠글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가리사니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여자답게 살고 싶어라

경찰 조사로는 화재로 숨진 다섯명 가운데 네명은 인근 유흥업소에서 적게는 1080만원에서 많게는 2900만원에 팔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죽은 사람들이 업주에게 빚을 진 사실을 확인하고 공갈·강취 혐의를 밝혀내기도 했다.

쉬파리골목의 이런 매매춘 실태는 비단 이곳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닐 터이다. 매매춘 지역 어디서나 인신매매, 불법감금, 성매매 강요, 강취 등의 구조적 폭력이 상습적으로 저질러지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더구나 매매춘을 단속·예방하고 인권유린 사태를 막아야 할 공무원과 경찰이 직무유기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현재 여성단체의 대략적인 추산으로는, 전국에 걸쳐 '항락업소'는 30만곳이 넘고, 여기서 일하는 여성은 120만명 가량으로 15~29살 여성 전체 인구의 20%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매매춘 행위의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고, 성폭력 경험이나 주위 사람의 유혹 등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매춘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어디에서나 여러가지 형태로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고, 주요 도시들에서는 '허가받은 곳'처럼 공공연하게 구역이 정해져 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형식상의 금지주의와 실제상의 규제주의가 모순을 빚고 있는 것이

다. 정부의 정책은 매춘여성의 발생 예방과 선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위해 상담, 교육, 직업훈련, 건강검검 등이 행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매춘여성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오래 전부터 진행됐다. 그런데도 매매춘은 오히려 광범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권력과 매매춘 공모사를 끊어야

성매매는 자본주의제도 아래서 이뤄진 성의 상품화라는 주장도 있고, 가부장제 사회의 불평등한 남녀관계와 남성 중심적 성문화의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심지어는 매매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전지구적인 현상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는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띠면서 다양한 형태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매춘 문제는 성매매 행위의 원전 근절이 목표이겠으나, 그 이전이라도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철저히 규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권력과 매매춘의 공모사슬부터 끊을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매매춘 근절을 향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쉬파리골목에 둘러쳐진 절망의 벽은 인간의 자존을 위해서라도 부수어야 마땅한 일이다.

한국에서 살아보니



닐다 아코스타 가르세테

(주한 파라과이대사관 1등 서기관)

만 4년 전 한국에 부임한 뒤 20세기 말 한국사의 격동적인 순간들을 겪 지켜왔다. 1997년의 경제위기로 한국인들은 여러 방면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경제를 특징지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남성보다 불리한 여건

오늘날 한국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모방할 만한 하나의 개혁모델이 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인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역경에도

신감을 갖게 됐다. 한국인의 인(仁)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은 한국에 사는 동안 나에게 깊은 감명을 준 것들이다. 또 한국 문화의 다양한 모습들도 내 주의를 끌었다.

한국에서 여성은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고, 외국인 남성도 한국에서 지내기가 어려우며,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일하기는 골절로 어렵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변화를

야에서 일을 맡고 있는 한국 여성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면 나 같은 외국인 여성도 더 이상 흔히 않은 경우로 여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한국 여성은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교분야 같은 데는 여성의 참여가 드물다. 나는 비록 심각한 경제 및 사회 문제로 남성우월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발도상국과

도전은 여성들의 몫이다. 자리는 거저 선물받는 것이 아니라 전 여성들이 땀과 노력을 한 결과 얻어내야 할 것이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의 것에 대한 한국 젊은이들의 태도를 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눈치챌 수 있었다. 또 한국에서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문화가 표출되고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은 불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몫' 스스로 찾아야

이와 함께 나는 가까운 장래에 한국 여성들이 아직도 참여가 저조한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며 사회에서 그들의 능력과 자성이 걸맞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열망을 가질 때에만 실현될 수 있으며 오직 시간만이 그것을 말해줄 것이다.

약력

남미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출신인 가르세테 1등 서기관은 아순시온 가톨릭대(경영학 전공)와 스페인 마드리드 외교관학교를 마치고 198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6월 주한 파라과이대사관 1등서기관으로 부임한 이후 5년째 현

여성 사회참여 아직은...

외치는 소리가 이따금 들리지만 아직도 이 좁에서는 큰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 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어야 하는 노력은 남성 동료들에 비해 2배가 된다.

지난 4년 동안 주로 남성의 영역에 속해 있는 한국의 공적 사적 분야와 인사들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한 여자를 대화의 상대로 대면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반발한다. 차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이는 별로 없고 차갑게 대하거나 다른 태도를 갖는 이들이 많다. 또 대부분은 외국인 여성인 우리의 존재를 무시한다. 외교와 같은 공적인 일을 하는 외국 여성은 흔히 않은 경우로 여

과과이 출신이지만 여성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영역에서 많은 자리를 얻기 위해 싸워왔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파라과이 여성들은 대소 기업체의 일선에서 활동하며 국가 경제활동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 파라과이 외무부와 특수분야에서 일하는 전체 관리 중 35% 정도가 여성으로 이들 중 일부는 조직 안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파라과이의 해외외교직 30개 중 4곳이 여성 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교황청 페루가 그렇다. 파라과이 여성들의 외교 분야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1989년

한국에서 살아보니



닐다 아코스타 가르세테

(주한 파라과이대사관 1등 서기관)

만 4년 전 한국에 부임한 뒤 20세기 말 한국사의 격동적인 순간들을 겪 지켜왔다. 1997년의 경제위기로 한국인들은 여러 방면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경제를 특징지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남성보다 불리한 여건

오늘날 한국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모방할 만한 하나의 개혁모델이 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인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자

신감을 갖게 됐다. 한국인의 인(仁)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와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은 한국에 사는 동안 나에게 깊은 감명을 준 것들이다. 또 한국 문화의 다양한 모습들도 내 주의를 끌었다.

한국에서 여성은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고, 외국인 남성도 한국에서 지내기가 어려우며,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일하기는 곱절로 어렵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변화를

야에서 일을 맡고 있는 한국 여성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면 나 같은 외국인 여성도 더 이상 흔치 않은 경우로 여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한국 여성은 예술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본야 같은 데는 여성의 참여가 드물다. 나는 비록 심각한 경제 및 사회 문제로 남성우월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발도상국과

도전은 여성들의 몫이다. 자리는 거저 선물받는 것이 아니라 전 여성들이 땀과 노력을 한 결과 얻어내야 할 것이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의 것에 대한 한국 젊은이들의 태도를 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눈치챌 수 있었다. 또 한국에서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문화가 표출되고 있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은 틀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몫' 스스로 찾아야

이와 함께 나는 가까운 장래에 한국 여성들이 아직도 참여가 저조한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며 사회에서 그들의 능력과 지성에 걸맞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열망을 가진 때에만 실현될 수 있으며 오직 시간만이 그것을 말해줄 것이다.

여성 사회참여 아직은...

외치는 소리가 이따금 들리지만 아직도 이 점에서는 큰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 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은 남성 동료들에 비해 2배가 된다.

지난 4년 동안 주로 남성의 영역에 속해 있는 한국의 공적 사적 분야의 인사들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한 여자를 대화의 상대로 대면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반발한다. 차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이는 별로 없고 차갑게 대하거나 다른 태도를 갖는 이들이 많다. 또 대부분은 외국인 여성인 우리의 존재를 무시한다. 외교와 같은 공적인 일을 하는 외국인 여성은 흔치 않은 경우로 여겨진다.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의 분

과에 출신이지만 여성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영역에서 많은 자리를 얻기 위해 싸워왔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파라과이 여성들은 대소 기업체의 입선에서 활동하며 국가 경제활동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 파라과이 외무부의 특수분야에서 일하는 전체 관리 중 35% 정도가 여성으로 이들 중 일부는 조직 안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파라과이의 해외외교직 30개 중 4곳이 여성 대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교황청 폐부가 그렇다. 파라과이 여성들의 외교 분야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1989년부터다.

약력

남미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 출신인 가르세테 1등 서기관은 아순시온 가톨릭대(경영학 전공)와 스페인 마드리드 외교관학교를 마치고 198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6월 주한 파라과이대사관 1등서기관으로 부임한 이후 5년째 한국에서 근무중이다.

1990년대 이후 인류는 다양하고 급진적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1세기의 변화를 가장 충격적으로 실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여성이 문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한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고정관념은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심한 편이었긴 하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근까지 성차별 문화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다.

새롭게 맞고 있는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라는 감격적 구호는 지금까지의 세기가 남성의 지배였음을 역설적으로 대변하기에 충분하다. 20세기는 주로 남성의 근육에 의존하여 사회적 재화를 대량으로 창출 유통 소비하는 산업사회의 원리가 지배한 시대였다. 이에 따라 문제해결의 접근방법도 남성적 특성에 따라 남성이 주도해 왔다.

지식정보시대의 주인공

21세기가 열리면서 문명의 패러다임은 지식정보화, 세계화, 네트워크화, 지배구조의 변화로 표현되는 거대한 물결로 파도쳐 오고 있다. 1980년대 퍼스널 컴퓨터의 개발은 비약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을 초래하여 지식정보의 전달매체인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 지식정보의 온라인 멀티미디어로의 통합, 그리고 정보통신, 방송, 엔터테인먼트의 융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촉발시킴으로써 지식정보의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있다.

20세기 냉전의 종식은 지식정보화와

名士칼럼

장 상 (이화여대 총장)



여성교육 국가지원 늘려라

더불어 세계화라는 또 다른 변화의 급류를 몰아오고 있다. 굳게 닫혀 있던 국경을 허물고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무한경쟁 속에서도 국제간 상호의존성이 필연적 현상으로 증진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같은 지역연합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잡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물결은 결과적으로 인간 개개인이 갖는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다양성이 더욱 신장돼 산업사회가 기반을 두고 있던 사회 각 부문의 구조와 기능, 운영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상호의존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연적이며, 그러한 네트워크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다양한 참여자들을 수평적으로 연대시키고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생산양식이 '근육에서 두뇌(from brawn to brain)'로 이행하는 지식혁명사회에서 감성적이며, 섬세성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관계성이 뛰어나고 또한 창조적인 여성적 특징은 양성평등의 통합성 위에 새로운 인류문명 창출의 주역으로, 대안세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확보해야 한다. 가령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7000달러)이 20년 후 일본(2만달러)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국은 일본의 3%를 훨씬 넘는 매년 8.5%의 경제성장률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인력의 참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고령화의 급진전이 예상되는 21세기에 젊은 남성인력만으로는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선진국에 도달할 수 없다.

21세기 국가경쟁력 좌우

경제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권에서 정치 외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력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자료는 전세계에서 대통령 또는 총리로 활동중인 여성은 11명이며, 세계 190개 국가 가운데 15개국에서 지금까지의 관습을 깨고 외무장관을 여성으로, 14개국에서 재무장관을 여성으로 임명하고 있다.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여성인력에 대한 관심은 이제 남만적인 페미니즘으로서가 아니라 인류문명사적으로, 그리고 국가발전의 전략 차원에서 우선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수한 여성인력을 배출할 여성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지원의 수위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선진국으로의 시간을 단축하는 바로미터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야말로 21세기를 위한 가장 적합한 준비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젠 여성들이 나서게 하라

한국시론



임혁백

고려대학교수
정치외교학

“
유연성이 지배하는 21세기
여성역할 확대는 시대적요구
여성부 신설 늦었지만 고무적
”

21세기는 여성의 세기이다. 21세기에
남전체제가 해체되고 세계화, 지식정보
화, 민주화의 3대 혁명이 진행되면서
불화 반목 대결의 '경성정치'의 시대가
지나가고 관용, 화해, 상생의 정신에 기
초하여 평화를 만들어 가는 '연성정치'
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또 군사 안보
중심의 '높은 정치(high politics)'에서
환경 문화 인권 반공 교육 청소년 건강
복지문제의 해결을 중시하는 생활정치
또는 '낮은 정치(low politics)'로 중심
축이 이동하고 있다. 연성정치와 낮은
정치의 시대에는 여성과 정치적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전쟁을 하는 데는
남성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을 지 모르
나 평화를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남을
배려하고 양보와 타협에 능한 여성에게
비교우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21세기가 3F (Fiction Feeling Fe
male)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이 지배
하는 디지털 사회(Fiction)에서는 감
성, 섬세함, 유연성(Feeling)이 요구되
는 연성정치가 지배할 것이고 연성정치
는 자상하게 남을 배려하는 여성(Fem
ale)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탈냉전시대에 여성의 정치적 진출은
눈부시다. 20세기를 마감한 1999년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구의 여성
의원 비율은 40%를 상회하였다. 대표적
으로 프랑스 의회는 모든 정당으로 하
여금 여성후보자를 50%이상 강제로 공
천케 하는 '남녀동수공천법'을 만장일
치로 통과시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월에 국회는
비례대표의원 후보자중 30%를 강제로
여성에게 할당해야한다는 개정 정당법
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대표하는 새천
년 정치개혁의 상징이다. 그러나 여전
히 한국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전세계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바닥에 위치하고
있고 여성의 권한(gender empower
ment)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조
사한 102개국중 78위에 머물고 있다.
한국여성이 교육수준과 경제능력은 높
으면서도 지위와 권한은 아프리카의 모
잠비크보다 낮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
이다. 이 점에서 국민의 정부가 여성의
지위를 선진국 수준까지 올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21세기 디지털 혁명기
에 급증하고 있는 여성 인력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여성
정책을 추진·집행할 수 있는 여성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은 늦었지만 대단히 환

영할 일이다.

신설될 여성부는 한국여성이 정치적
으로 대표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
며, 정보를 창출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며,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 한
반도 평화를 만드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첫째,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신장시켜 그
간 남성정치가 저지른 패거리정치, 지
역주의 정치,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자
상하게 배려하는 감성의 정치, 깨끗한
투명정치, 공존과 화합의 상생정치가
특징인 '여성정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시정
하여 여성의 소득을 향상시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위치
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양성(兩性)민주
주의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 여성의 '정보이용능력(informat
ion literacy)'을 높여서 성별간 디지
털 격차를 해소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성이 한국의 디지털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여야 할 것
이다. 넷째, 지구환경을 생명친화적 모
성으로 보살피는 한국여성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녹색환경 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여성이 배려와 보살
핍,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한반도에
서 '참깁을 녹여 정기를 만드는' 평화
만들기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